# 한국민주주의 행로와 기업가 정신

#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이사

2017 한국경제 논설 고문

2016 삼성물산 등기임원 사외이사(감사위원)

2015 한국경제신문 주필

2014 한국경제 논설위원실 실장, 상무이사



주 최 (사)한국유엔봉사단 총재 이인제 (사)한국유엔봉사단 이사장 안헌식(010-9022-4242)

일 시 2018년 4월 26일(목) 오후 7시

장 소 리베라호텔 3층 몽블랑홀

#### 한국 민주주의의 행로

#### (1) 민주주의는 보편적 제도인가

모든 국가와 모든 국민이 민주적 정치 체제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나라중에 이 제도를 지속가능하게 정착시켜 왔던 나라는 극히 드물다. 남미는 포퓰리즘으로 무너졌고 남유럽조차 시행착오를 겪고있다. 동구권은 이제 민주화 과정에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는 일본 정도다. 한국과 인도는 선거는치르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걸맞은 사회적 성숙은 아직 먼 얘기다. 민주주의는 보편적 정치제도라고 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것은많은 조건의 성숙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제도다. 프랑스는 소위대혁명 이후 100년 이상이 걸려 지금의 여전히 들끓는 상태에도달했을 뿐이다.

1차 대전 이전에 이미 민주적 정치에 도달한 나라조차 수없이 많은 그리고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국가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볼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국가와 사회를 오히려 혼란에 빠뜨렸고 더욱 자주 시궁창에 처박히기도 했다. 민주주의는 매우 불안정한 제도이며 정의하기 어렵고 정착되기도 어려운 제도이다. 그것은 그 제도를 유지하는 한 사회의 총체적 역량과 성숙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것이다.

민주주의는 몇 가지 기본 요소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첫째 구성 원의 동질성이다. 차별성이거나 이질성이 아니라 분명히 동질성 이다. 이해관계로부터 등거리에 있다는 전제가 없이 민주정은 성 립하지 않는다. 한 표의 값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로부 터 등거리에 있다는 개념상 전제는 필수적이다. 제한적 지식에 대한 겸양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이다. 제한적 지식은 자신의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상대성이다. 이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민주정은 성립하기 어려운 독재 상태에 빠진다. 이독재는 민중이 광장을 장악하면서 막이 올리게 된다. 나치가 대표적인 경우다. 나치에서부터 출발해 중국의 소위 피의문화혁명,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이르면 민주주의는 사회불안과피의 숙청과 민중폭동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고 말해야할 정도다.한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신 것인가?

다음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주어진 아젠다에 대한 등거리적 이해 능력이다. 숙고하는 민주주의 이거나 심의능력 있는 국민이 아니라면 포퓰리즘은 필연적이며 민중의 의지 혹은 일반의지라는 이름의 독재 체제와 독재자의 출현 역시 피할 수 없다. 등거리의이해능력과 이해관계, 지식의 한계에 대한 겸양이 없이는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현대 대중 민주주의는 국민이기만하면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 무질서와 정의될 수 없는 유권자라고하는 비정형의 권력집단이 자의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결정하는나날의 결정에 그들의 국운과 개인의 명운을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 가. 실패 사례는 왜 이렇게 많나

- 1. 실패 사례 : 포퓰리즘
  -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
  - -브라질 포퓰리즘의 현실
  - -그리스 고대와 현대
- 2. 실패 사례 : 대중 독재

- 나치즘 파시즘 스탈린니즘
- 민주적 중앙집중제
- 인민이 직접 통치한다는 환상
- 촛불 혁명: 광장의 유혹
- 3. 실패 사례 : 공산주의
  - -러시아
  - -중국
  - -식민지 해방 후진국들의 경험
- 4. 실패 사례 : 아랍 민주화
  - -IS의 등장
  - -이민 난민의 폭발
  - -이슬람 근본주의

#### (2) 자유민주주의의 조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 밖에 없다. 인민이나 민중은 비정형의 제한된 인간군이라는점에서는 유사한 표현이지만 일정한 계층의 배제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분되는 말이다. 인민이나 민중은 감성적이며 즉물적 단편적이고 복잡성은 배제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 아니 그런 결정을 하는 주체를 우리는 민중 혹은 인민이라고 부르게 된다. 국가 의사결정은 복잡하다. 그러나 대중 혹은 인민 민중은 단순하다.

이 간극은 결국 대의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이는 직접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의 열등성 때문이지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다. 직접 혹은 인민민주주의가 민주정의 본질에 맞다

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그것은 현실제약 때문에 대의제(간접민주주의)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열등성 혹은 제한성 그리고 불가피한 아마추어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제한된 지식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정치제도로 인식케 함과 아울러 시장경제 제도를 가장 우수한 제도로 인식하는 이론적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시장은 제한된 지식의 융합과정이며 제한적 지식이야말로 각자의 상대적 엣지를 전체적인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는 논리는 미제스 이후에도 여전히 깊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가의 서류와 서식 위에 존재하는 지식은 명시적 지식으로서 시장의 암묵적 지식과는 크게 다르다는 생각이야말로 시장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 혹은 공산주의 명령경제에 대한 비판의 일각을 이루고 있다.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그 성숙화 과정에서 점차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 나간다.

### 1. 법치주의:

- 실태는 쓰레기 법의 양산
- 소위 북지국가론이 쓰레기법 양산의 주범
- 입법 만능주의: 아무런 법이나 만들 수 있다
- 입법의 우위 현상: 사법 행정권의 약화
- 목표와 수단에 대한 몰이해: 법 만들면 그 취지가 실현된다.
- 자유의 법, 자연의 법 아니면 무조건 타락한다
- 법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한다
-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야 한다

- 2. 3권 분립: 견제와 균형
  - 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란
  - 입법부 우위는 인민민주주의
  -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 나치즘의 탄생
  - 자연적 질서와 작은 정부: 시장 작동 과정에 대한 이해
  - 광장의 열기를 조용히 가라앉히는 곳이 사법부
  - 개별적 민원을 처리하는 곳은 행정부
  - 보편적 규율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
- 3. 사회적 합의와 만장일치의 거부
  - 만장일치가 가능하려면
- $\triangle$  뇌물  $\triangle$  추상적 규범적 의제에 한정  $\triangle$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 △ 수권 기구로서의 중앙위원회 △ 중앙위원회를 지배하는 독 재자의 존재
- 누가 고가의 스트라디바리를 가질 것인가: 부자인가 아니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가
- 4. 국민 주권론
- 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연령 성별 납세여부 국적여부 상주여부
  - 개별적 국민인가. 대중인가. 인민인가
  - 추상적 존재로서의 국민
  - 광장의 국민
  - 주권은 어떻게 행사 되는가: 절차는?
- (3) 한국 민주주의 현 위치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로부터 강력한 직접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구형 대중독재형 국가로의 전화 과정에 놓인 것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어떻게 보면 △ 역사의 운명을 함께하는 같은 국민이라는 일체감, △ 역사가 전진한다는 흥분, △바로 내가 그 순간에 현장에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서 있다는 도취감. △ 사회적선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고 희생하고 있다는 도덕적 우위에 대한압도하는 신뢰, △ 지도자에 대한 무한정의 신뢰, 등을 요청한다는 정황은 대중독재론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인다. 촛불시위가 바로 그런 현상의 집약판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대중이 광장에서 맛보는 황홀감 중에 진정으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한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엄연한 사실이다.

- 대중 독재적 현상으로의 유혹
-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집착
- 국정에 대한 몰이해
- 인민주의적 성향
- 위험한 소위 직접성의 강화
- 황홀한 도취감: 역사의 진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동지의식

이런 현상은 나치즘 문화혁명 킬링필드가 만들어 내는 광기의 한 조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독일 중국 등이 빠져들었던 민주주의의 오류 속으로 잠겨들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험스런 상황이다.